

재정정책이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김성순(단국대)

I. 서 론

최근의 경제현상을 보면 세계적으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소득 불균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경제성장과 함께 소득 양극화 심화 등 소득 불균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성장보다는 복지 요구가 증대되어 장기적으로 조세부담의 증대와 함께 성장잠재력까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하에 재정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성장과 분배의 조화로운 재정정책 방향을 찾고자 한다. 그러나 기존연구들은 재정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들이 논의되어 왔음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는 경제성장과 함께 소득분배를 같이 논의하고 있다는데 그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I장 시론에 이어 II장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이론적 논의를 한 후, III장에서 본 연구에 적합한 방법론을 보색하고 IV장에서 이에 기초한 실증분석을 우리나라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한 후 결과를 도출하여, V자에서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본 연구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Kuznets(1955)는 소득분배를 향상시키는 경제성장의 효험과 관련하여 경제성장이 소득수준이 낮은 초기에는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나, 소득수준이 일정한 수준이상이 되면 경제성장이 소득분배를 개선시킨다는 역 L자 가설(inverted L hypothesis)을 제시하였다. 그 이후 Ahluwalia(1976), Smith(1983), Papanek and Kyn(1986), Ram(1988), Anand and Kanbur(1993), Campano and Salvatore(1988), and Deininger and Squire(1998) 등은 경제성장과 불평등사이의 역관계를 확인하는 노력을 하였다. 이를 연구는 쿠즈네츠 가설이 제한적임을 나타낸다. 이 결과들은 자료 선택과 소득분배에 대한 대리변수에 따라 민감한 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최근 Alesina and Rodrik(1991), Alesina and Perotti(1993),

Bertola(1991), Perrotti(1993), Persson and Tabellini(1994), Saint Paul and Verdier(1991) 등은 소득분배와 내생적 성장에 관한 연구를 통해 다시 이에 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 연구들은 대체로 1) 쿠즈네츠의 영향을 받아 불평등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다루고 있다. 2) 소득분배, 경제성장 및 재정정책 간의 상호작용을 시계열 변화로 살펴보았다. 3) 소득분배와 성장간의 결정적 연계는 공공선택이론과 특히 중간투표자정리에 의해 이루어졌다. 소득분배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정치적 과정을 통해 조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초기에 시장소득을 택하여 투표자가 분배로부터의 이득과 손실을 추정 평가하고 분배정책에 투표하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방식으로 분배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 연구들의 이론적 논리는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소득불평등이 높은 나라일 수록, 그나라는 정치적인 의사결정과정을 통하여 재분배 정책이 왜곡되게 추진되고 이는 경제활동 참가자의 근로의욕(work effort)을 저하시켜 경제성장을 더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소득불평등이 높은 나라는 재분배정책을 저지하려는 고소득층의 로비와 이에 따른 정치부패 등으로 경제성장에 동원될 가용자원 일부가 잔식됨으로 인하여 경제성장의 문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논리이다.

공공정책에서의 차이는 나라간의 경제성장률 차이 설명을 가능케 해준다고 본다. 예를 들면 금융규제가 신하거나 지나친 과세로 자본축적이 낮은 경우, 자본소유를 금지하거나 법적 모장이 불투명한 경우, 사람들은 투자를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공공정책 자체가 서로 다른 그룹이나 개인들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강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사람들 사이에 결정적 차이는 자산과 번 소득에 대한 소유권에 있다. 그러므로 소득 불균형은 조세와 공공지출 같은 정책 결정요소로 들어가야 한다.

Perrotti(1993)는 인적자본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고 소득 재분배 정도를 투표에 의해 결정하는 경제학에서 소득분배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그 모형의 특징은 1) 1인당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분배에 패턴을 보이고, 2) 성장은 한 그룹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다른 그룹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외부성과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이는 잠재적으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능력에 달렸으며, 3) 소득분배의 초기 패턴과 결과를 이끄어내는 정치균형이 성장을 촉진 혹은 저해하느냐는 성장을 촉진하는 외부성 네카니즘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였다. 또한 투표를 도입한 비중첩세대 모형(non-overlapping generations model)을 사용하여 소득수준과 불균형 수준사이의 역 T자 관계가 성립함을 보였다.

손종칠(2010)에 의하면 1990-2005년 간의 108국가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소득불평등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횡단면분석의 경우 약하게 나마 부정적 영향을 미치나 다만 우수한 인적 자본과 높은 투자수준을 확보하는 경우 경제성장을 장기적으로 제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문 및 시스템 GII 등 동태적 패널기법을 이용한 분석결과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고, 3SLS 분석 결과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상이하여, 선진국의 경우 그 영향력이 불확실한 반면,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부정적 영향이 뚜렷하게 나

타났다. Jha(1999)는 현 소득분배가 이전지출, 소득세와 같은 재정정책을 통해 미래 소득분배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는데, 재정정책은 발전수준, 소득분배, 정치참여도에 의해 결정된다. 분배분제를 고려한 정치균형 내생성장모형으로 유도된 축약형 회귀식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인도, 대만, 중국 3개국 확장면 분석은 시차 소득분배가 이전지출을 통해 미래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에 영향을 주며, 대만, 중국에 대한 시계열 분석은 저소득 경제는 경제성장의 촉진을 위해 낮은 침체 수준을 부과함으로 인해 소득분배 악화가 수반된다는 것을 보였다.

Bayraktar and Moreno-Dodson(2010)은 개발도상국들을 고성장국 군과 비교국가군으로 나누어 재정정책이 경제성장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분석하였는데, 재정지출은 생산적 지출과 비생산적 지출, 핵심(core) 지출과 비 핵심지출로 구분하였을 때 고성장국 군만 생산적 지출, core expenditure가 경제성장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의 비선형성을 갖는지에 대한 검정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III. 모형의 설정 및 자료

이에 관한 모형으로는 교육투자, 조세를 통한 분배, 생산서비스에 대한 공공투자 재원조달도시의 공공부문을 반영한 모형, 정치과정과 경제구조를 결합한 모형 등이 있다. 이 모형에서 정치적 과정은 재정정책에 대한 개인선택을 기시경제정책으로 변환함으로써 반영하고 있고, 경제구조는 재정정책과 경제성장 사이 연계를 통해 반영하고 있다.

그 대표적 모형들을 살펴보면, Bayraktar and Moreno Dodson(2010)은

$$\begin{aligned} \text{1인당 경제성장률} = & C + \text{전기의 1인당 경제성장률} + \text{민간투자율} + \text{인적 자본} + \text{조세수입} \\ & + \text{전기의 재정지출} + [\text{전기의 재정지출}]^2 + \text{재정수지} + \text{소비자물가상승률} + \text{오차항} \end{aligned}$$

(C: 절편항, 각 변수앞의 계수는 생략한) 형태의 추정모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부재원조달, 예산수지도, 인한 편의(Bias)를 회피하기 위해 정부예산제약식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재정정책의 시행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시차를 고려하기 위해 재정지출에 시차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재정지출의 2차항을 도입하여 경제성장에 미치는 비선형성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

Clark, Lawson and Robert model(2008)은

$$\text{1인당 실질 GDP성장률} = C + \text{1인당 실질GDP성장률}(t-1) + [\text{민간투자}/GDP] + \text{인적자}$$

본 +최고 한계세율순위 +최고한계세율순위의 변화 +법적구조 순위 +법적구조 순위변화 +화폐건전성 순위 +화폐건전성순위 변화 +부역개방도 +부역개방도 변화 +정부소비지출 +정부소비지출 변화 +오차항

지니계수= $C + 1\text{인당 실질GDP성장률} + \text{최고한계세율순위} - \text{최고한계세율순위변화} + \text{법적구조순위} + \text{법적구조순위변화} + \text{화폐건전성순위} + \text{화폐건전성순위변화} - \text{정부소비지출} + \text{정부소비지출 변화} + \text{오차항}$

과 같이 모형을 설정하여 조세정책이 경제성장과 소득 불균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통계자료는 지니계수 백분율로 환산하고, 정부크기, 법적구조, 화폐건전성, 무역 규제에 관한 변수는 세계경제자유지수(EEW)의 0에서 10까지의 비율로 환산한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국가간 panel data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조세/지출] 수준이 높으면 경제성장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고, 누진세제는 소득분배 평등화하고, [조세/지출] 수준의 증가는 평등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화폐 건전성의 증가는 경제성장을 높이고, 소득평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결과는 선진국에만 타당하며, 후진국의 경우에는 타당하지 않은을 보였다.

Panizza(2002) 모형은

$1\text{인당 GDP성장률} = C - \ln(1\text{인당소득}) - \text{소득분배변수} + \text{조세변수} + \text{디비} + \text{오차항}$

과 같이 설정하여 미국내 주들의 panel data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소득불균형과 경제성장간의 음(-)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불균형 측정방법의 작은 차이가 큰 추정차 이를 보여줌을 밝히고 있다.

Jha(1999) 모형은

황단면 자료 분석에서는

$GINI = C + [\text{이전지출}/\text{소득}] - [\text{이전지출} * \text{GDP}] + \text{오차항}$

$\text{이전지출} = C + \text{초년도 } 1\text{인당GDP} - [\text{초년도 } 1\text{인당GDP}]^2 + \text{인구 } 3,4\text{분위 소득비중} + [\text{인구 } 3,4\text{분위 소득비중}] * [\text{정치참여도}] + \text{오차항}$

$1\text{인당GDP성장률} = C - [\text{이전지출} - [\text{이전지출} * \text{GDP}]] + \text{초기 } 1\text{인당GDP} + \text{관료효율지수} + [\text{투자}/\text{소득}] + \text{중등 교육}(\text{secondary education})\text{이수율} + \text{사회정치안정도} + \text{오차항}$

$X_t - X_{t-1}$

시계열 자료 분석에서는

$$GINI \text{ 계수} = C + [\text{직접세/소득}] + GDP(1/2) + \text{오차항}$$

1인당GDP성장률= $C - GDP - [\text{직접세/소득}] + \text{조정변수(control variable: 인구증가율, 투자/소득)} + \text{오차항}$

과 같은 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이 모형을 이용하여 현 소득분배가 재정정책을 통해 미래 소득분배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재정정책은 이전지출과 소득세 변수를 사용하여 인도, 대안, 중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횡단면자료 분석에서는 시차소득분배는 이전지출을 통해 미래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에 연관됨을 보였고, 시계열 자료 분석에서는 저소득국은 경제성장을 위해 지직접세수준을 시행하여 소득분배가 악화됨을 보였다.

본 모형도 이러한 모형을 원용하여 설정하였으며, 한국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재정정책이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보기 위해 Shigemi Jha(1999), Paniizza(2002), Clark, Lawson and Robert(2008), Bayraktar and Moreno-Dodson(2010) 등의 추정방법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추정식을 도입하였다.¹

$$\begin{aligned} gdpg_t &= C + b_1 gdpg_t + b_2 \Delta IPY_t + b_3 \Delta School_t + b_4 \Delta Fiscal_t + \\ &\quad b_5 \Delta REVY_t + b_6 CPIG_t + b_7 \Delta GINI_t + b_8 \Delta OPEN_t + \epsilon_t \end{aligned}$$

$$\begin{aligned} \Delta GINI_t &= C + b_1 gdpg_t + b_2 \Delta IPY_t + b_3 \Delta School_t + b_4 \Delta REVY_t + \\ &\quad b_5 \Delta Fiscal_t + b_6 CPIG_t + b_8 \Delta OPEN_t + \eta_t \end{aligned}$$

단, $gdpg_t$ = t기의 1인당 실질GDP성장률, Δ : 차분 변수($X_t - X_{t-1}$)

$IPY=[\text{민간투자}/GDP]*100$

$School$ = 인적 자본 지표로 국민의 평균교육이수연수

$REVY$ = [총조세수입/GDP]*100

$Fiscal$ = [총재정지출/GDP]*100 또는 [사회복지비]/GDP]*100

$CPIG$ = 소비자 물가상승율

1 이 추정식의 설명변수가 수요측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로서 이에 대한 식별문제로 공급측 요인이 고정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 추정치가 일치성을 갖지 못함.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Moreno-Dodson(2008)의 추정방법을 참조바람.

GINI= 소득불균등 지표로서 지니계수,

OPEN= 개방도(=[(수출+수입)/소득]*100) 또는 [수출/소득]*100

c= 상수항, ϵ, η =오차항

본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982년-2010년 기간의 연간 자료로 그 자료에 대한 축지는 다음과 같다. 1982년 이후 자료를 사용한 이유는 GINI계수가 1982년 이후 자료만 있기 때문이다.

1인당 경제성장률(GDPG)은 1인당 실질 GDP 증가율로 한국은행 발표 국민계정 통계의 2005년 불변가격 GDP 자료를 통계청 발표 추계인구로 나눈 수치를 사용하였고, 평균교육 이수연수는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대리변수로 Barro and Lee(2001)와 통계청 발표 자료를 사용하였다. 불가상승률은 통계청 발표 소비자物价 상승률 자료를 이용하였다. 재정지출 자료는 경상자료로만 발표됨을 감안하여 일반정부의 정부지출의 경상GDP 대비 비율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밸류하여 사용하였다. 사회복지지출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일반정부의 [보건지출+사회보호지출]에 경상GDP 대비 비율을 사용하였다. 이 변수는 [이전지출/GDP]의 대리변수로 보았다. 조세수입은 통계청 발표 자료를 이용하여 [조세수입/GDP]로 사용하였다. 재정수지 변수는 통계청 발표 [통합재정수지/GDP]로 사용하였다. 소득불균등을 나타내는 불평등지수는 통계청 발표 지니계수를 이용하였다. 개방도(openness)는 한국은행 발표를 이용하여 [수출액+수입액]*100/GDP로 사용하였다. 인구증가율은 통계청 발표 추계인구를 이용하였다.

〈표 1〉 자료의 특성

(단위: %)

| 연도 | 1인당GDP증가율 | 재정지출/GDP | 조세/GDP | 지니계수 | 사회복지비/GDP |
|-----------|-----------|----------|--------|-----------------|-----------|
| 1970-1979 | 7.52 | 14.71 | 14.01 | - | 4.75 |
| 1980-1989 | 7.30 | 16.01 | 14.12 | 0.27 (82-89) | 6.18 |
| 1990-1999 | 5.68 | 17.02 | 13.90 | 0.25 | 7.27 |
| 2000-2010 | 4.13 | 19.26 | 14.97 | 0.30 | 7.94 |

자료: 기초자료를 이용해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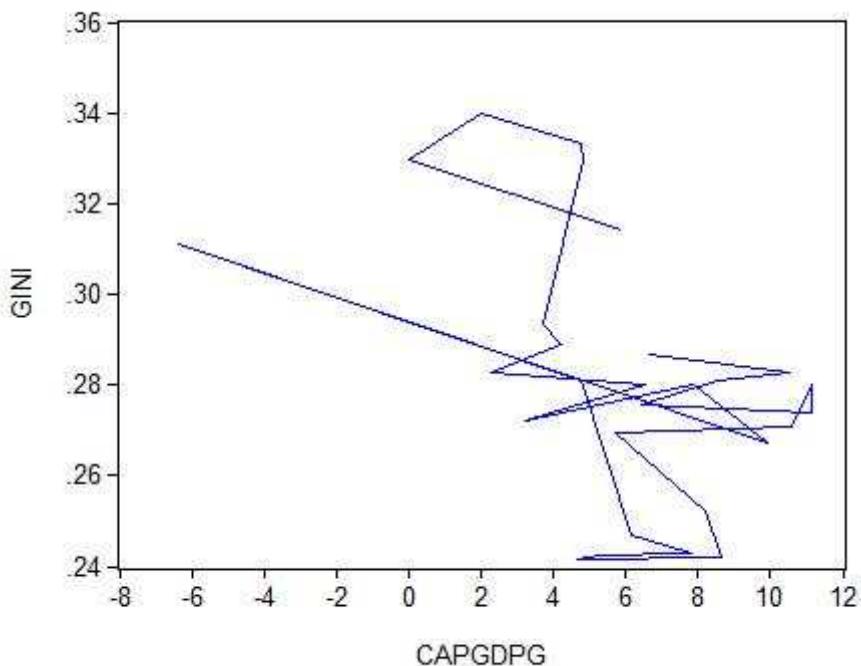
1970년 이후 최근까지의 자료의 특성을 10년 단위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40년간 1인당 경제성장률은 절차 낮아지고 있는데, 조세의 GDP에 대한 비중은 별로 안 높어난데 반해 재정지출의 GDP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어, 재정팽창의 경향을 보여준다. 특히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이 최근 급증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또한 소득불균등을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2000년대 들어 사회복지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득불균등 지표는 오히려 악화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IV. 실증분석

본격적인 실증분석에 앞서 사용된 자료들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림 1]을 보면 1982년 이후 지니계수와 1인당 경제성장률과의 관계를 볼 수 있는데 양자간의 역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경제성장률이 높아질수록 소득분배가 개선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쿠즈네츠 역 U자 가설을 적용하면 우리나라가 최근 소득수준이 높아져 선진국형 형태를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림 1] 1인당 경제성장률과 지니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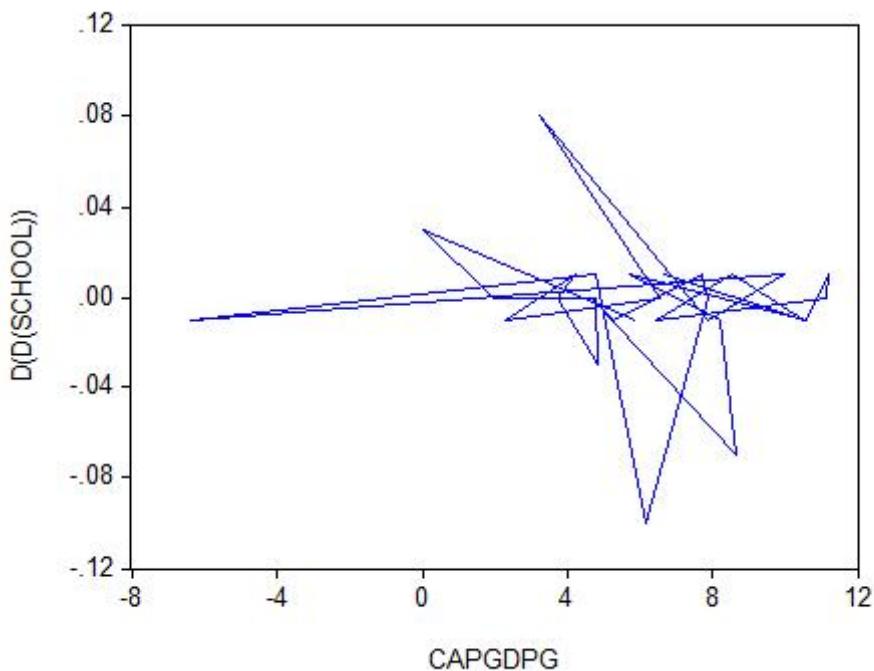


다음 [그림 2]는 인적자본의 대리변수로서 평균교육년수와 경제성장률간의 관계를 살펴본 것인데 양 변수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난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인적자본의 확충이 경제성장률을 높이는는데 기여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사용된 시계열자료들에 대한 안정성(Stationarity)을 살펴보기 위해 Augmented

Dickey Fuller test(ADF)와 Phillips Perron test(PP)를 병행 실시하였다. PP test는 ADF test에 사용된 추가 설명변수에 기인한 자유도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 통계량을 조정한 방법이다. 그 검정 결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인당 실질 GDP는 단위근(Unit Root)이 존재하나 1인당 실질 GDP 증가율(CAPGDPG)과 실질 GDP 증가율(RGDPG)은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았다. 소비자물가 상승율(CPIG), 사회복지지출 증가율, GDP대비 조세 증가율, 지니계수 차분, 인구증가율의 차분, 개방도의 차분 변수가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였다. 다만 평균교육년수는 2차차분변수가 안정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시계열 자료가 단위근이 존재하더라도 공적분(Co-integration)이 존재하는 경우 변수간의 장기적인 균형관계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Johansen-Juselius(1990)의 공적분 길정을 이용하여 여러 변수 조합에 대한 공적분 존재 여부를 길도하였다. 그러나 <표 3>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질GDP, 지니계수(gini), 재정지출/GDP, 평균교육년수(school), 개방도(open)] 및 [실질GDP, 지니계수, 조세수입/GDP, 평균교육년수(school), 개방도(open)] 두 개의 5개 변수 조합에 공적분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평균교육년수와 경제성장률



<표 2> 단위근 길정 결과(ADF, PP)

| | ADF | | PP | |
|-------------|-------|------------------|-----------|------------------|
| | 수준변수 | 차분변수 | 수준변수 | 차분변수 |
| 1인당 실질 GDP | -1.88 | -5.94 *** | -1.05 | -8.55 *** |
| 민간투자/GDP | -2.47 | -6.72 *** | -1.52 | -3.58 ** |
| 조세수입/GDP | -2.46 | -5.55 *** | -2.26 | -7.37 *** |
| 재정지출/GDP | -3.29 | -5.15 *** | -3.46 * | -5.76 *** |
| 재정수지/GDP | -2.21 | -5.82 *** | -2.80 | -5.57 *** |
| 소비자물가 상승율 | - | -4.12 *** | - | -6.45 *** |
| 평균 교육연수 | -1.58 | -2.06 | -1.71 | -2.31 |
| | | -6.48 *** (2차차분) | | -5.78 *** (2차차분) |
| gini계수 | -2.09 | -5.13 *** | -5.80 *** | -7.46 *** |
| 개방도 | -2.44 | -5.36 *** | -1.89 | -8.58 *** |
| 인구증가율 | -3.12 | -5.05 *** | -2.11 | -4.16 ** |
| 실질GDP | -1.72 | -4.97 *** | -2.96 | -11.99 *** |
| 사회복지 지출/GDP | -1.97 | -3.86 ** | -2.14 | -4.30 *** |
| 수출액/GDP | -1.54 | -5.10 *** | -1.13 | -5.72 *** |

주: 1) MacKinnon(1991)에 의한 ADF 임계치: 1% -4.32, 5% -3.58, 10% -3.29, PP 임계치: 1% -4.30, 5% -3.57, 10% -3.22를 사용함. * 10%, ** 5%, ***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2) 1970년~2010년 자료임. 제시된 통계량은 상수항과 시간추세를 고려한 수치임.

<표 3> 5변수[실질소득, 지니계수, 재정지출, 교육연수, 개방도]에 대한 공적분 검정

| 공적분 수 | Eigenvalue | Trace Statistic | 5% Critical value | Prob.** |
|-----------|------------|-----------------|-------------------|---------|
| none | 0.98 | 166.79 | 69.81 | 0.00 |
| at most 1 | 0.43 | 42.46 | 47.85 | 0.15 |
| at most 2 | 0.36 | 25.81 | 29.79 | 0.13 |
| at most 3 | 0.34 | 12.64 | 15.49 | 0.13 |
| at most 4 | 0.02 | 0.53 | 3.84 | 0.46 |

주: 1) [실질GDP, 지니계수, 재정지출/GDP, 평균교육연수, 수출입액/GDP] 5변수에 대한 Unrestricted Cointegration Rank Test(Trace)로서, Trace test 는 5% 유의수준하에서 공적분 없다는 귀무가설을 나타냄. 상수항과 추세가 포함한 공적분회귀식을 사용했으며, Akaike information criterion과 Schwarz criterion에 의한 시차수를 고려함.

2) *는 5% 유의수준하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는 임계치임

3) **는 Mackinnon-Haug-Michelis(1999)의 p-value임.

<표 4> 5변수[실질소득, 지니계수, 조세수입, 교육연수, 개방도]에 대한 공적분 검정

| 공적분 수 | Eigenvalue | Trace Statistic | 5% Critical value | Prob.** |
|-------|------------|-----------------|-------------------|---------|
| none | 0.99 | 181.90 | 69.81 | 0.00 |

| | | | | |
|-----------|------|-------|-------|------|
| at most 1 | 0.45 | 43.52 | 47.85 | 0.12 |
| at most 2 | 0.33 | 25.39 | 29.79 | 0.14 |
| at most 3 | 0.26 | 8.71 | 15.49 | 0.39 |
| at most 4 | 0.10 | 3.10 | 3.84 | 0.78 |

주: 1) [실질GDP, 지니계수, 조세수입/GDP, 평균교육연수, 수출입액/GDP] 5변수에 대한 Unrestricted Cointegration Rank Test(Trace)임. 나머지는 <표 6>의 주와 같음.

또한 이들 변수간의 인과관계 검증을 1982-2010년 기간에 대해 Granger causality test로 실시한 결과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인당 경제성장률과 민간투자간의 쌍방 인과관계가 존재하며 경제성장률은 지니계수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며, 조세수입과 재정지출간에도 쌍방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재정지출은 지니계수도 개방도는 재정지출과 조세로, 민간투자가 재정지출과 조세로, 교육연수가 경제성장률, 민간투자도의 인과관계를 보였다. 여기서 민간투자와 인적자본이 경제성장에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며, 경제성장이 조세수입과 재정지출도의 인과관계를 모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제성장과 재정지출, 물가상승율이 gini계수에도의 인과관계를 보인다.

<표 5>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 Null Hypothesis: | F-Statisti | | |
|--|------------|---------|--------|
| | Obs | c | Prob. |
| CAPGDP does not Granger Cause D(IPY) | 29 | 3.92761 | 0.0334 |
| D(IPY) does not Granger Cause CAPGDP | | 3.05748 | 0.0656 |
| GDGP does not Granger Cause D(IPY) | 29 | 2.06354 | 0.1489 |
| D(IPY) does not Granger Cause GDGP | | 2.98176 | 0.0697 |
| D(D(SCHOOL)) does not Granger Cause D(IPY) | 29 | 5.60239 | 0.0101 |
| D(IPY) does not Granger Cause D(D(SCHOOL)) | | 1.22429 | 0.3117 |
| D(GTY) does not Granger Cause D(IPY) | 29 | 0.98796 | 0.3870 |
| D(IPY) does not Granger Cause D(GTY) | | 3.52292 | 0.0456 |
| D(TAXY) does not Granger Cause D(IPY) | 29 | 0.69912 | 0.5069 |
| D(IPY) does not Granger Cause D(TAXY) | | 3.96829 | 0.0324 |
| CPIG does not Granger Cause D(IPY) | 29 | 0.23716 | 0.7907 |

| | | | |
|-------------------|-------------------------------|---------|---------|
| D(IPY) does not | Granger Cause CPIG | 6.01320 | 0.0076 |
| GDPG does not | Granger Cause CAPGDP | 29 | 0.33124 |
| CAPGDP does not | Granger Cause GDPG | | 8.80612 |
| D(D(SCHOOL)) | does not Granger Cause CAPGDP | 29 | 2.79362 |
| CAPGDP does not | Granger Cause D(D(SCHOOL)) | | 0.24140 |
| D(SOCIAL) does | not Granger Cause CAPGDP | 29 | 0.65455 |
| CAPGDP does not | Granger Cause D(SOCIAL) | | 3.83051 |
| D(GTY) does not | Granger Cause CAPGDP | 29 | 0.13167 |
| CAPGDP does not | Granger Cause D(GTY) | | 4.19523 |
| D(OPEN) does not | Granger Cause CAPGDP | 29 | 0.28491 |
| CAPGDP does not | Granger Cause D(OPEN) | | 5.34777 |
| CPIG does not | Granger Cause CAPGDP | 29 | 0.44251 |
| CAPGDP does not | Granger Cause CPIG | | 4.41830 |
| D(GINI) does not | Granger Cause GDPG | 29 | 0.52276 |
| GDPG does not | Granger Cause D(GINI) | | 3.89037 |
| D(D(SCHOOL)) does | not Granger Cause GDPG | 29 | 2.71373 |
| GDPG does not | Granger Cause D(D(SCHOOL)) | | 0.18743 |
| D(SOCIAL) does | not Granger Cause GDPG | 29 | 4.20192 |
| GDPG does not | Granger Cause D(SOCIAL) | | 1.01533 |
| D(TAXY) does not | Granger Cause GDPG | 29 | 2.37114 |
| GDPG does not | Granger Cause D(TAXY) | | 3.47295 |
| D(OPEN) does not | Granger Cause GDPG | 29 | 3.70919 |
| GDPG does not | Granger Cause D(OPEN) | | 4.45306 |
| CPIG does not | Granger Cause GDPG | 29 | 1.05359 |
| GDPG does not | Granger Cause CPIG | | 3.86638 |

| | | | | | |
|------------------|---------------|---------|----|---------|--------|
| D(GTY) does not | Granger Cause | D(GINI) | 29 | 5.01554 | 0.0151 |
| D(GINI) does not | Granger Cause | D(GTY) | | 1.57135 | 0.2284 |
| D(TAXY) does not | Granger Cause | D(GTY) | 29 | 2.90844 | 0.0740 |
| D(GTY) does not | Granger Cause | D(TAXY) | | 4.10828 | 0.0292 |
| <hr/> | | | | | |
| D(OPEN) does not | Granger Cause | D(GTY) | 29 | 4.06023 | 0.0303 |
| D(GTY) does not | Granger Cause | D(OPEN) | | 1.03723 | 0.3698 |
| D(OPEN) does not | Granger Cause | D(TAXY) | 29 | 2.93067 | 0.0726 |
| D(TAXY) does not | Granger Cause | D(OPEN) | | 1.59981 | 0.2227 |
| <hr/> | | | | | |

한편 각 변수들간의 상관계수 행렬을 살펴보면,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인당 경제성장률과 경제성장률은 .99로 거의 완전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이 경제성장률을 변수와 상관관계가 높은 순서대로 살펴보면, 민간투자 .73, 실질GDP .54, 평균교육연수 .54, 개방도 .18, 조세 .16, 총재정지출 -.65, 사회복지지출 -.38, 지니계수 -.0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편 지니계수와의 상관계수를 보면, 평균교육연수 .16, 조세 .07, 경제성장률 .08, 개방도 .15, 민간투자 .21, 실질GDP .25 순이다. 이 결과에 의하면 민간투자, 개방도의 증가가 경제성장률의 증가 및 소득불균등 완화에 기여함을 알 수 있다. 평균교육연수의 증가는 경제성장과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져 경제성장에 기여하나, 지니계수와도 양(-)의 상관관계를 가져 소득불균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정변수는 재정지출 특히 사회복지지출의 증가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나 조세 증가는 소득불균등 완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 상관관계 분석(1982~2010)

| | CPIG | GDPG | D(GINI) | D(GTY) | D(IGY) | D(OP EN) | D(RG DP) | D(SC HOO) | D(S OCI y L) | dtax AL) |
|---------|-------|-------|---------|--------|--------|----------|----------|-----------|--------------|----------|
| CPIG | 1 | | | | | | | | | |
| GDPG | -0.07 | 1 | | | | | | | | |
| D(GINI) | 0.26 | -0.05 | 1 | | | | | | | |
| D(GTY) | 0.42 | -0.65 | 0.05 | 1 | | | | | | |
| D(IPY) | -0.04 | 0.73 | -0.22 | -0.4 | -0.23 | | | | | |
| D(OPEN) | -0.3 | 0.18 | -0.15 | -0.48 | -0.5 | 1 | | | | |
| D(RGDP) | -0.37 | 0.54 | -0.25 | -0.6 | -0.51 | 0.65 | 1 | | | |

| | | | | | | | | |
|------------|-------|-------|-------|-------|-------|-------|-------|-------------|
| D(SCHOOL) | 0.20 | 0.54 | 0.16 | -0.22 | -0.07 | -0.37 | -0.19 | 1 |
| D(SOCIAL) | -0.15 | -0.38 | -0.13 | -0.03 | -0.26 | 0.49 | 0.24 | -0.46 1 |
| D(TAXY) | -0.13 | 0.16 | 0.07 | -0.07 | -0.11 | 0.38 | 0.31 | -0.21 0.2 1 |

실증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다. 먼저 지니계수와 재정변수, 그리고 조정변수(control variable)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식(1)-(4)와 같이 나타난다. 식(1)은 인적 자본(human capital)을 대리하는 평균교육연수의 경제성장에 유의하게 크게(19.0)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재정지출의 증가는 오히려 경제성장에 유의하게 부정적(-2.16) 영향을 미친다. 또한 1998년 외환위기가 경제성장을 크게 떨어뜨렸을(-7.49)을 디비변수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는 재정지출의 증가보다 국민들의 교육수준을 높여 인적 자본을 확충하는 것이 경제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추정결과는 Clark, Lawson and Robert(2008)의 [조세/지출] 수준의 증가가 경제성장을 낮춘다는 결과와도 부합된다. 식(2)는 재정지출 변수와 디비변수를 생략하고 대신 조세수입 변수만을 재정변수로 도입하였을 때의 회귀분석 결과로, 소득불균등을 대리하는 지니계수의 감소(-35.98) 즉 소득불균등의 완화가 경제성장에 크게 유의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또한 평균교육연수의 증가가 유의한 긍정적 영향(5.34)을 미친다. 다만 개방도 즉 수출입의 증가가 경제성장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0.37)을 미친다. 이 결과는 인적자본의 확충과 함께 소득불균등의 완화가 경제성장에도 매우 중요한을 시사한다. 또한 자원이 부족하고 소국 개방경제인 한국의 경우 개방도의 증대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필요함을 보여준다. 식(3)에서는 지니계수의 감소(-19.67), 개방도의 증가(0.59)가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줌 뿐만 아니라 실질소득 수준의 증가는 경제성장을 유의하게 낮춘다(-5.75)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경제성장보형에서 보여주듯 소득수준이 높아질 수록 투자의 한계효율이 낮아져 경제성장이 낮아지는 선진국형 경제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식(4)는 재정변수로 사회복지지출, 개방도를 반영하는 변수로 [수출/GDP]을 채용하고, 조정변수로 민간투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도입하였을 때, 수출의 증대가 경제성장에 유의한 큰 긍정적 효과(15.68)를 나타내며, [민간투자/GDP]도 경제성장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1.15)을 미친다. [사회복지비/GDP]의 증가는 경제성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음(-12.00)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재정변수, 조정변수들이 지니계수에 미치는 영향은 식(5)와 식(6)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다. 식(5)는 경제성장률, 실질소득 수준, 조세수입, 개방도, 인적자본이 소득불균등에 미치는 영향을 본 것인데, 경제성장을 변수를 종속변수로 했을 때보다 지니계수를 종속변수로 했을 때 설명력이 다소 떨어진다 보여주나, 경제성장률의 증가가 소득불

〈표 6〉 회귀분석 결과

| 종속변수 | 1인당 경제성장률 | | | | 지니계수 | |
|---------------------|---------------------|----------------------|--------------------|----------------------|------------------|-------------------|
| | (1) | (2) | (3) | (4) | (5) | (6) |
| 절편 | 3.32* | 80.6*** | 80.5*** | 12.32*** | 0.99*** | -0.05 |
| 경제성장률 | | | | | 0.01* | |
| 실질소득 | | | 5.75*** (5.32) | | 0.07** (2.52) | |
| 지니계수 | -8.23 (-0.79) | -35.98*** (-3.56) | -19.67* (-2.04) | | | |
| 재정지출/GDP | -2.16*** (-3.07) | | | | | |
| 조세수입/GDP | -0.13* (-1.95) | -0.02 (-0.47) | 0.05 (0.67) | | 0.001 (0.84) | |
| 개방도 | 0.01 (0.06) | 0.37*** (3.18) | 0.59*** (2.87) | | 0.003 (0.84) | -0.00 (-0.12) |
| 영국교육연수 | 19.93*** (2.43) | 5.34*** (3.73) | 11.31 (0.62) | | 0.20 (0.55) | 0.40 (1.06) |
| 민간투자/GDP | | | | 1.15*** (3.27) | | -0.24* (-2.01) |
| 사회복지비(인건비총)/GDP | | | | -12.00*** (-3.02) | | -0.13* (-1.78) |
| 불가상승률 | | | | 0.11 (0.62) | | 0.01** (2.69) |
| 수출/GDP | | | | 15.68** (2.78) | | |
| dummy(1998) | -7.49*** (-3.06) | | | -6.58** (-2.32) | | |
| Rbar***2 | 0.76 | 0.55 | 0.77 | 0.78 | 0.25 | 0.43 |
| D.W. | 1.22 | 1.85 | 2.26 | 1.49 | 1.40 | 1.40 |
| Q(s, l,) | 9.60(.14) | 2.48(.64) | 4.09(.39) | 5.71(.12) | 0.71(.86) | 0.53(.91) |
| White test (s, l,) | 26.28 (0.19) | 20.19 (0.44) | 20.19 (0.44) | 20.48 (0.15) | 18.53 (0.55) | 24.41 (0.22) |
| Ramsey RESET | 0.01 (0.94) | 13.55 (0.001) | 0.52 (0.47) | 0.10 (0.75) | 8.19 (0.01) | 3.52 (0.07) |

주: 1) dummy(1998)는 1998년 위험위기 더미임.

- 2) * 10%, ** 5%, *** 1% 수준에서 t-값이 유의함을 의미함.
 3) ()는 p-value. D.W.는 1차시계열 상관 검정통계량, Q는 Ljung-Box statistic으로 2차이상의 시계열 상관 검정통계량이며, White test는 이분산성 검정으로 χ^2 -statistic임. Ramsey RESET은 omitted variable과 non-linearity에 대한 Ramsey regression specification test 통계량임.

균등을 완화(-0.01)하며 실질소득 수준이 증가할 수록 소득분배가 개선됨(-0.07)을 보여준다. 이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에 따라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경제성장이 소득분배 개선에도 기여함을 보여주어 앞의 식(2), (3)의 결과와도 부합된다. 또한 쿠즈네츠의 역 U자 가설에 비추어 볼 때 한국도 소득수준이 높아져 경제성장이 소득분배를 개선시킨다는 선진국형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식(6)은 민간투자, 불가상승률, 재정변수로 사회복지비를 설명변수로 도입하였을 때 민간투자 증가가 지니계수를 유의하게 떨어뜨리며(-0.24), 사회복지비 증대도 지니계수를 낮추는 데 기여하나(-0.13).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증가는 지니계수를 유의하게 높인(0.01)을 보여준다. 이는 불가상승의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며, 민간투자, 사회복지비 증가가 소득분배를 개선하나 민간투자를 높이는 것이 사회복지비 증가보다 더 크게 소득분배 완화에 기여한데 미추어 민간투자 활성화가 사회복지비 증대보다 소득분배 개선에 보다 유익한 정책임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두 가지 회귀식의 결과를 종합하면, 사회복지비 증대가 지니계수를 낮추고 소득분배 개선이 경제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Jha(1999)의 소득분배가 이전지출을 통해 미래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도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및 시사점

본 논문은 재정정책이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의 1982년-2010년 연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니계수, 교육년수, 개방도, 불가상승률, 재정지출 등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지니계수의 감소 즉 소득불평등의 감소가 경제성장률을 높이며, 개방도의 증가 특히 수출의 증가, 교육연수의 증가가 경제성장률을 높이나, 정부지출 증대, 사회복지비의 증대는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인당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지니계수의 감소가 유의한 큰 영향을 미친으로서 소득불균등 개선이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도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개방도 증대가 경제 성장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쳐 현재 추진중인 FTA 확대 등이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될을 보여준다. 그러나 정부지출의 증가, 특히 사회복지지출 증대가 1인당 경제성장률을 오히려 낮출으로써 재정긴축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민간투자, 정부지출, 교육년수, 개방도 증가가 지니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민간투자율증가, 사회복지 지출 증가는 지니계수를 낮추나 사회복지지출의 증가보다 민간투자 증가가 더 소득불균형 완화에 더 효과적인을 보여준다. 반면 불가상승률 증가는 지니계수를 높인으로써 소득불균등을 신화시키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성장율을 높이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수준을 높이는 인적자본 형성, 수출 증대 등 개방도의 확대, 소득불균형의 완화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민간투자의 활성화가 재정정책의 증대 보다 긴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에 대한 유인제계를 보다 강화하여야 하며,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합리화하고 재정지원방식의 성과지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GDP 대비 재정규모 억제가 필요하며,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부족하여 해외부문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하에서 FTA 확대 등 개방화 촉진을 통한 경제성장율 제고가 중요하며,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규제완화 등 시장의 활성화 정책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소득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불가안정과 함께 사회복지비 증대를 통한 소득분배 정책보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소득분배 완화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소득불균등을 개선하면서 경제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처방인을 실증분석 결과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성장보다 분배위주의 정책은 민부격차완화에 별도 도움이 되지 못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나눈에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²

셋째 사회복지지출이 비생산적 지출이라 할지라도, 정부의 바람직한 목표가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소득분배, 경제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데 있다고 할 때, 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복지지출 수요의 급증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출증가세가 요구될 것이다. 또한 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전은 저소득층의 인적투자 여력을 높이고 분배상태 개선을 통하여 사회적 갈등요인을 줄여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지출 확대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전달체계를 면밀히 살피하여 지출이 효율적으로 편성·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재정의 건전성과 함께 급격한 재정팽창을 억제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아울러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할 것은 첫째, 이용가능한 자료의 한계 특히 소득분배에 관한 삼기 시계열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관측치가 작아 추정결과를 해석하는데 신뢰도 면에서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기시적 관점의 실증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그 원인규명 등 미시적인 관점의 분석과 가치판단을 전제로 한 규

2) 이에 대해서는 최근 고용없는 실장을 통해 일자리창출이 어려울 수도 있고, 실장을 통해 민부격차 완화를 가져오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가 원천 차이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나, 성장을 회생하고 소득이전 등 분배위주의 정책을 쓰는 것은 최근 양극화 신화 현상에서 보듯 근본적 해결책이 아님을 지적할 것인 양극화 신화 현상에 대해서는 조경엽·김학수(2008) 등을 참조 바람.

번석 연구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강성원 외 4인, “경기침체기 재정정책의 성공방안,” CEO Information 제698호, 삼성경제연구소, 2009. 4. 1.
- 강성진, “경제성장과 사회후생간의 연계,” 『금융경제연구』 working paper 423, 2010. 3.
- 고영선, “정부의 경제적 역할: 세계적 추세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KDI정책포럼 197호, 2008. 3. 8.
- 김성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재정정책 방향의 모색』, 국가정책연구 공보과제 연구용역 보고서, 2009. 8, 한국조세연구원.
- 성명재, “소득분배 동향 고찰,” 현안분석, 『재정포럼』, 2009. 10, 한국조세연구원.
- 손종칠,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 Cross-country 비교분석,” 『금융경제연구』 제425호, 2010. 3, 한국은행.
- 옥동석, “기시재정운용과 재정준칙,” CFE Report 40, 자유기업원, 2008. 4. 30.
- 조경업·김하수, 『재정지출 분석과 개선방향』, 정책연구, 2008. 09, 한국경제연구원, 2008.
- 최준옥·류덕현·박형수, 『재정지출의 분야별 재원배분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05-09, 2005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
- Ahluwalia, M. S., “Inequality, Poverty, and Development,”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3, 1976, pp. 307-342.
- Mesina, A. and D. Rodrik, “Distributive Politics and Economic Growth,” NBER working Papers no. 3668, 1991.
- Mesina, A. and R. Perotti, “Income Distribution, Political Instability, and Investment,” NBER working Papers no. 4486, 1993.
- Anand, S. and S. H. R. Kanbur, “Inequality and Development: a Critique,”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41, 1993, pp. 19-43.
- Astaganalp, Serkan, Bornhorst, F., Gupta, S. and Elsa Sze, “Public Capital and Growth,” IMF Working paper WP/10/175, July 2010.
- Barro, R. and J. Lee, “International Data on Educational Attainment: Updates and Implications,” *Oxford Economic Papers* 3, 2001, pp. 541-563.
- Bayraktar and Moreno-Block, “How can Public Spending help you grow? An Empirical Analysis for Developing Countries,” WPS 5367, World Bank, July 2010.

- Berg, Andrew and Jonathan Ostry, "Inequality and Unsustainable Growth: Two Sides of the Same Coin?" IMF staff discussion note, research department, April 8, 2011.
- Bertola, G., "Market Structure and Income Distribution in Endogenous Growth Model," NBER working Papers no. 3851, 1991.
- Campano, F. and D. Salvatore, "Economic Development, Income Distribution and the Kuznets Hypothesis," *Journal of Policy Modelling* 10, June 1988, pp. 265-280.
- Clark, J. R. Lawson and A. Robert, "The Impact of Economic Growth, Tax Policy and Economic Freedom on Income Inequality," *Journal of Private Enterprise*, Oct. 2008.
- Deininger, K. and L. Squire, "Measuring Income Inequality: a New Data-Base," *World Bank Economic Review*, 10, 3, 1996, pp. 565-91.
- Deininger, Klaus and L. Squire,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Finance & Development*, March 1997.
- Deininger, Klaus and L. Squire, "New Ways of Looking at Old Issues: Inequality and Growth,"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57, 1998, pp. 259-287.
- Diamond, J. "Government Expenditures and Economic Growth: An Empirical Investigation," FMI Working Paper 89/45, May, 1989.
- Eicher, Theo S. and Stephen J. Turnovsky, *Inequality and Growth: Theory and Implications*, Cambridge: MIT Press, 2003.
- Engen, E. M and J. Skinner, "Fiscal Policy and Economic Growth," NBER Working Paper, no. 4223, December 1992.
- Galindo, Miguel-Angel, "Public Expenditure, Income Distribution, and Growth in OECD Countries," *International Advances in Economic Research*, May 1, 2003.
- Garcia-Penalosa, C. and S. J. Turnovsky, "Growth, Income Inequality, and Fiscal Policy: What are the Relevant Tradeoffs?" Working paper, Jan. 2006.
- Jha, Sailesh K., *Fiscal Policy, Income Distribution, and Growth*, EDRC Report Series # 67, Asian Development Bank, Nov. 1999.
- Kim, Seong Suhn, "A Comparison Study on the Fiscal Policy Effects to Income, Money, Price between pre- and post- Currency Crisis Periods in Korea," 61th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Public Finance(IIPF), Jeju ICC, Korea, August 22-25, 2005 .
- ., "General Equilibrium Approach to Government Spending Effect," *The Korean Economic Review*, vol. 7, no. 2, The Korean Economic Association, Winter 1991.
- ., "An International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Japan to the

- Economic Effects of Fiscal Policy," *Asian economies*, vol. 26 no. 4, Dec. 1997, pp. 5-34.
- , "A Study on the Structural Change of Fiscal Policy after Korean Currency Crisis," *Economic Papers*, vol. 7 no. 1, the Bank of Korea, July 2004, pp. 86-114.
- Jha, Sailash, "Fiscal Policy, Income Distribution, and Growth," EDRC Report series No. 67, November 1999.
- Kneller, R., M. F. Bleasby and N. Gommell, "Fiscal Policy and Growth: Evidence from OECD countri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74, 1999, pp. 171-190.
- Kuznets, Simon, "Economic Growth and Income Distribu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45, pp. 1-28, 1955.
- Moreno-Dodson, B., "Assessing the Impact of Public Spending on Growth",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4663, World Bank, 2008.
- Papanek, G., and O. Kyn, "The Effect on Distribution of Development, the Growth Rate, and Economic Strategy,"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23, 1986, pp. 55-65.
- Panizza, Ugo, "Income Inequality and Economic Growth: Evidence from American Data," *Journal of Economic Growth* 7, 2002, pp. 25-41.
- Perrotti, Roberto, "Political Equilibrium, Income Distribution, and Growth," *Review of Economic Studies* 60, 1993, pp. 755-776.
- Persson, T. and G. Tabellini, "Is Inequality Harmful for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84, 1994 pp. 601-621.
- Ram, R., "Economic Development and Income Inequality: Further Evidence on the U Curve Hypothesis," *World Development* 16(11), 1988, pp. 1371-1375.
- Saith, A.,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a Critique of the Cross Country U-hypothesis,"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13, 1983, pp. 15-32.
- Saint Paul, G. and T. Verdier, "Education, Democracy, and Growth," Yale University, mimeo, 1991.

〈Abstract〉

Fiscal Policy Effects on Economic Growth and Income Distribution

Seong Suhn Kim (Dankook University)

The Korean economy is to emerge from its current critical situation and move on a sustainable growth track, it is a top priority that the harmonious policy groping for the pursuit of concurrent development of economic growth and income distribution would be found. There may have not been getting better of income distribution even though recent government had implemented strong distributive policy rather than economic growth by sharp increase of social welfare spending during 2002-2007 in Korea. So it is needed that the reason why the result occurred has been examined.

The systematic study on this topic is urgently required in view of current situation of public sector in Korea but has been passed over. My research is intended to focus on the issue and to analyze its implication empirically.

The results show that reducing income inequality and increasing trade openness improve economic growth but increase in rapid social welfare spending impede economic growth. Also economic growth would improve income distribution and trade openness hurt income equality.

Key Words: Economic Growth, Income Distribution, Fiscal Policy,